

# 강력범죄 전과자 20년간 택배업 종사 금지

文 대통령, 생활적폐·국무회의

“기업 지원하는게 정부의 소임  
車 부품업체 지원책 모색돼야  
아세안, 中·美 이은 수출 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분야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 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진 분야”라

며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연

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산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제작비 금융이나 선수금 환급보전 등을 지원하는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개발을 지원하는 방법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13~18일 열린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 소회를 밝히면서 “신남방정책에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은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밝혀줬다. 우리도 이 국가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 확대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아세안(ASEAN)과 인도는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규모와 수출규모 면에서 중국 다

음으로 큰 제2의 시장”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자 한류문화가 가장 먼저 확산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베트남만 봐도 인구 1억명에 경제성장률은 7%대를 보이고 있다. 작년 베트남과의 교역액은 42%, 수출액은 46% 증가했으며 이미 우리에게 중국과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최장 20년간 택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도 명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판사 탄핵 소추 與 “즉각시작” 野 “시기상조”

자유한국·바른미래 국회일정 거부  
검찰수사 ‘탄핵 판사 명단’ 불투명

대표판사들의 사법농단 연루자 탄핵 검토 의견으로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여야 간 이견으로 ‘반쪽짜리 탄핵’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2차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논의에는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했다. 대표판사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 찬성이 나왔지만,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반쪽으로 갈라진 사법부 내 여론을 보여주고 있어 법관 탄핵 시 내용으로 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근거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

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9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8석에 이른다.

다만 112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과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점은 부담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확히 누구를 탄핵 명단에 올려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는 현재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뿐이다.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혐로를 견고 있다. 중앙지검은 19일 사법농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을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할 경우,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준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범철 기자 joker@

## 軍 드론 개발, 예산만 날릴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군 당국도 ‘드론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을 깨닫지 못한 원대한 꿈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자조적이라고 비난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군사기술 강국 미군도 실현하지 못한 기적 문제를 우리 군이 단기간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육군은 전장의 승패를 바꿀 5대 개념체인저 중 하나로 ‘드론봇’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봇은 드론(Drone·소형 무인기)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지능화된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드론봇이 소부대 전투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형화된 드론봇이 은밀기동을 유지한 채 소총 등을 이용해 적을 타격해야만 실질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페이로드의 (화물 등의 중량의 합계) 한계가 있는 소형 드론봇에 사격시 발생하는 반동 등을 줄여주는 자세제어장치, 원거리에서 조준사격이 가능한 사격통제 장비, 총기와 탄약을 적재하면 사실상 기동자체가 힘들어진다.

설령 드론봇을 대형화해 페이로드를 늘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커진 덩치로 인해 적으로부터 탐지되기 쉽상인데다, 안티드론 시스템에 걸려 무력화되기도 쉽다.

무엇보다 인간이 아닌 기계가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안전성이다. 드론봇이 조작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폭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정보기관에서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소형 드론을 전투체계인 드론봇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전투가 아닌 수송용 드론봇은 어떨까?



전문기자 칼럼

문형철  
(국방전문)

이 또한 쉽지 않다. 페이로드의 한계, 비행거리 등의 문제를 가진 소형 드론봇이 실전에서 무거운 탄약과 장비를 적응성 있게 실어 나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미군은 어떻게? 그들은 드론봇에 대한 개념부터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아프카니스탄의 산악지역에서 보급의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은 짐을 싣고 병력을 따라 움직이는 견마로봇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모듈만 교체하면 전투도 가능하다.

미군은 유인헬기를 무인화해 페이로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극복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싸움과 기술의 달인 미국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군은 한걸음에 천리를 가여하는 것 같다.

자칫 국민의 혈세가 증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이미 우리 군은 미국이 추진하다 포기했던 OICW(Objective Individual Combat Weapon)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사례가 있다.

무려 6.5kg의 중량과 K-2 소총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의 명품 소총 ‘K-11’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기자에게 “이건 역기 수준의 돈먹는 총”이라고 말한 적 있다.

K-11은 내구성, 사격통제장치 이상, 20유탄의 위력 등이 문제가 돼 왔다. OICW를 추진하던 다수의 국가들은 피카티니 레일 시스템에 임부에 맞게 총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captinm@

## 국방부, 3552억 투입 해·강안 철책 철거

군부대 무단사용 사유지 보상·매입

군 경계시설용 철책선 중 일부가 추가로 철거되고 첨단 과학장비로 대체된다. 내년부터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사유지 보상·매입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군 경계시설을 두고 불편함을 호소해 온 일부 주민들의 요청을 군 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자 3552억원의 국비를 들여 전국의 해·강안 경계철책 및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철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이유로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3552억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강안 경계철책(497억 5300만원), 유휴 국방·군사시설(2956억원), 해·강안 경계초소(99억30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경계철책 413.3km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이외에 169.6km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2km를 철거하고, 군사목적상 중요한 129km의 철책은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경계철책 철거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은 주민 생활 개선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인 병력감축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전방 해안경계 부대 지휘관 출신인



지난 2015년 4월 군부대와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릉시 연곡해변의 군 철책. /문형철 기자 captinm@

한 예비역은 “철책제거와 함께 TOD(열상감시장비), 중·장거리 및 단거리 사각감시장비를 도입해 병력 중심의 경계에서 장비 중심의 경계로 전환 될 것”이라면서 “장비중심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과학장비가 자연현상에 절대 만능은 아니며, 경계부대의 책임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